

공짜노동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12.31.(수) 서울신문(온라인), “포괄임금제 오남용 막겠다더니 올해 기획감독 0건” 기사 관련

- 노동부는 관리·감독 강화를 공언했으나 그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 2023년 포괄임금제 오남용 기획감독은 13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돼 72곳이 적발됐다. 미지급 수당은 29억 2000만 원에 달했다. 2024년에도 115개 사업장을 감독해 47곳을 적발, 6억 7000만 원의 체불 수당이 확인됐다. 하지만 2025년에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기획감독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앞선 감독에서 각각 53.3%, 40.8%에 달하는 높은 적발률을 기록했는데도 중단된 것이다.

2.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23년부터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음
- 특히 ‘25년에는 감독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본부 주도의 기획감독 대신,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제보, 청원 제기, 지방청 자체 감독 등으로 다양화하여 감독을 실시
- 이를 통해 오남용 의심 사업장 62개소 중 51개소에서 범위반을 적발 (82%)하였고 체불임금 9.8억 원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여, 효과적인 결과를 거두었음

* 감독 대비 적발 사업장 비율: ‘23년 53% → ‘24년 40.8% → ‘25년 82%

- 정부는 공짜노동 근절을 목표로 내년부터 지방관서 자체 감독과 함께 본부 주도 기획감독을 병행하고 물량도 연 200개소로 확대할 계획임
- 또한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포괄임금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신고·제보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관서에서 개별적으로 사안을 확인하고, 의심사업장에 대해 감독 또는 신고사건으로 처리하여 오남용을 확실하게 적발·시정하겠음
- * 익명신고센터 제보자와 통화→진정 제기 또는 감독 청원 의사 확인→감독 또는 신고사건 분류·처리→오남용 시정
- 이와 함께, 지난 12.30. 발표된 「실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과제」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바를 반영하여 오남용을 구조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입법도 조속히 추진하겠음

담당 부서	노동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	책임자	과 장	한진선 (044-202-7991)
		담당자	사무관	변재연 (044-202-7541)
담당 부서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	책임자	과 장	김태연 (044-202-7553)
		담당자	사무관	박종길 (044-202-7528)